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민주 김관영 도지사 후보
국민연금공단 찾아
전북 미래비전 제시
문화예술단체와 만나
정책 협약식도 가져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30일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전북도 문화예술단체와 정책 협약식을 체결했다.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30일 국민연금공단을 방문, '자산운용 중심의 특화 금융도시' 전북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경제현장 방문 차 국민연금공단을 찾은 김 후보는 공단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통해 향후 계획 및 공약사항을 점검했다.

김 후보는 "우리 전북을 자산운용 중심의 특화 금융도시로 만들어 전북의 미래를 열어 나갈 것"이라고 전제 한 뒤 "특화 금융도시 지정 및 금융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해 청년의 미래를 보장하고 전북 경제 발전을 이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유관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한국투자공사와 같은 공공 금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은 지역의 강점인 새만금과 연금 등 이전 공공 기관을 활용,

전북 혁신성장 산업 분야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금융 산업 성장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주력 산업인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특화 금융' 지원으로 지역 차원에 효과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관영 후보와 전북도 문화예술 단체는 이날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김 후보와 문화예술인 단체는 전북도민이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문화 특성을 고려해 문화발전 계

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대표 하는 문화산업으로 지향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예술창작 산업 작품에 의한 문화예술인 일자리 창출과 전북의 공연문화예술 발전 기반을 마련키로 약속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복지,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 지역문화진흥, 지역 공동체 기반 강화 등 문화예술 분야의 분명한 정책적 논의를 실천하기로 했다.

김관영 후보는 "지역문화에 대한 예술인과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예술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정치 판 바꾸자” | 조배속 국힘 도지사 후보, 도민께 지지 호소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조배속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가 전주시 교보생명을 찾아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식선거일 D-2, 국민의힘 조배속 도지사 후보가 선거일을 앞둔 30일 마지막 기자회견과 전주 시내 곳곳을 찾아가는 집중 유세를 통해 "전북의 정치판을 집권여당으로 바꿔 전북발전의 견인차가 되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다.

조 후보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총괄선대위원장 정운천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는 전북정치를 집권여당으로 판을 바꿔야 한다. 새정부와 함께 전북발전을 앞당기겠다"라며 '반드시 투표해 전북의 미래를 선택해 달라'고 마지막 한 표를 호소했다.

조 후보는 이어, "전북도민 성공시대를 열어갈 후보는 조 배속이다"고 확신한다. 압도적 지지를 보낸 문재인정부의 전북공약완료율은 16.4%에 불과하다"며 "전북도민의 기대를 저버린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 저의 꿈은 확실하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인사와 직접 소통하여 전북에안 15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만금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북을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겠

다. 도정에 청년자문단 500명을 위촉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활기찬 전북을 만들겠다"라며 "도민이 얼마나 민박하면 선거기간 중 후보가 수도권 지원유세를 가겠나. 민주당 선수교체는 그 나뭇잎에 그 밤일 뿐이다"고 성토했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조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오후에는 롯데백화점 앞 효자동 상신문화아트, 모래내시장, 전주서부시장과 전주유채국 앞으로 이어지는 전주 시내 변화를 집중 거리유세를 강행하며 마지막까지 지지를 부탁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지사 30일 도청 중랑상황실에서 제9차 대도약정책협의체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공동위원장의 조봉업 행정부지사, 유대근 우석대 교수, 민간 위촉위원, 관련 실국장 등 40여명이 함께 했다.

6·1 지선 본투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도내 611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거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검색을 통한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서비스를 찾을 수 있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이나 공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

월일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전북선거관리위는 "투표소 출입 전 손소독, 투표소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해 달라"면서 "투표 참여 시 마스크를 지참해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는 때에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전투표기간 중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몇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았다"면서 "투표용지 한 장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는 투표안내증 등을 촬영할 수 있지만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 역시 불가하며,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하는 경우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투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 30분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투표소에서 퇴장한 뒤 시작된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오후 6시 30분까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확진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게 된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유호상 기자

환경·노동문제 해결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5건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 중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2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으로 환경·노동 현안 해결은 물론, 국민의 민생과 직접 관련된 개정안이다.

특히, 윤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환경·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대표 발의한 5건의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석면·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 중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2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으로 환경·노동 현안 해결은 물론, 국민의 민생과 직접 관련된 개정안이다.

특히, 윤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등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적용 받도록 했다. 또한,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면건축물 소유자에게 석면관리 종합정보를 통한 관리대장 기록 의무를 부과하고,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중 건축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신고·등록일 경우 석면조사 착수시점이 명확하지 못한 맹점을 보완해 모든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석면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불만을 해소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해결하는 정치·책임 있는 정치' 실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 2명 검찰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있는 B씨를 30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완주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됐으며, 지인 등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은 통·리·반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투표지 촬영이나 공개, 훼손 행위 등은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선거일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인구감소지역 5년단위 국가기본계획 수립’

민주 이원택 의원 1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국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지난 총선에서 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위기에 지역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 이로 인해 지역간 심화되고있는 지역격차와 삶의 질 저하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및 연계·협력 활성화 체계를 구축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

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심의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및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의 수행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청년 및 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업, 주거 등 관련 시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에 대해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의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예산분석 역량강화교육

전북도의회(의장 최찬욱)는 30일 의총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및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를 실시 교육하는 오는 7월 제12회 지방의회 개원을 앞두고,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에 맞는 예산분석 심사기법과 실무시책을 공유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심사 지원체계를 구축,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는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10년동안 예산분석 업무를 총괄해 온 최승열 강사를 초빙해 3시간 가량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예산심사 및 사전절차 검토, △예결산 분석방향 및 주요시책 등 예산심사기법과 핵심사례를 소개하고,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유호상 기자

권익현 후보,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공표자 고발



권익현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후보 선거사무소는 30일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와 특정 후보 SNS 지지모임에 공표한 A씨를 여론조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선거일 2일 전인 30일 특정 부안군수 후보 SNS 지지모임에 '전주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언론사들의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 한곳에서는 2.5%, 다른 한곳에서는 1.7% 이기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 총투를 다해 승리를 사수 하자는 게시물을 게시했다.

권익현 후보 선거사무소 확인 결과 최근 언론사들의 비공개 여론조사는 실제로 실시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공표해 이것은 명백히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작한 허위 지지를 발표하며 권익현 후보 선거사무소는 즉각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관련 조사를 촉구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김성수 후보 “호국보훈대상자 나이제한 철폐”



무소속 김성수 부안군수 후보는 "부안군 호국보훈 대상자에 대한 나이 제한 철폐 등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후보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둔 30일 "부안군은 타 지자체에 비해 호국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미흡하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우대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후보는 2014년 12월 개정된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에는 수당 지원 대상자를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 부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지급 대상자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완주군 조례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만 65세 이상이라는 나이 규정 제한이 없다. 고창군 역시 나이 규정 제한이 없는 등 대부분 지자체들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거주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수 후보는 "충질의 고장 부안군이 호국보훈 대상자에 대해 지나치게 까다롭게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며 "군수에 당선되면 즉각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나이 제한을 없애고 특별지원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